

2018

Report

of Trend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7. part2 제 102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與 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3
2. " 지방분권 의지 있나 " 靑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4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 '규제프리존' 만질까 5
4. 美서 맺은 홍영표 · 김성태 약속에... 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6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 · 박근혜와 다르려면 7
6. 여야 , 민생경제법안 TF 31 일 가동 ... 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 9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公兪車 · 숙박 ,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10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11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공공기관 , 전국혁신도시로 12
2. "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 충청 · 호남 · 강원 협의회 추진 13

1. 與 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1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1 뉴스

02

주요내용

- " '朴' 규제프리존법 ' 과 文 ' 규제혁신 5 법 ' 은 달라 "
- " 혁신성장 걸림돌 되는 규제 찾아내야 "

- 더불어민주당은 17 일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과 4 차산업혁명을 뒷받침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힘
-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 혁신성장 / 규제혁신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규제혁신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
- 발제를 맡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 먼저 민주당이 내놓은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지역혁신특구법) 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규제프리존법' 의 차이부터 설명
 -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법률에)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한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이라면, 문재인 정부와 규제혁신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이라고 강조
 - 규제혁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특례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임
 -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가 도입해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 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게 함
 - 또한 규제특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책임보험과 공제가입 등의 방안을 마련
 - 규제혁신 추진 전략은 투트랙으로 접근,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을 개정해 추진하고, 법·제도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입법을 추진할 것
 -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
 - 규제혁신 5 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음
-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도 인사말
 - 국민 모두가 공정히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
 - 원구성을 마무리한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규제혁신 5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

2. "지방분권 의지 있다" 靑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부산일보

02

주요내용

■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조직 개편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2 곳의 비서관 자리를 통폐합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

- 22 일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이지만,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은 7 개월째 공석인 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 명이나 비어있음
- 이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청와대와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청와대가 현재 마련 중인 조직 개편 안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두 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
 -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함
- 특히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업무가 핵심인 자치분권과 지역 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의 업무 영역이 확연히 다른데도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신아일보

02

주요내용

■ 고용난에 투자 유인 '당근' 필요...과거 반대 입장 뒤집는 부담
 ■ 규제 샌드박스, 4대 패키지법 대안...신산업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

- 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 밝힘
- 고용대란과 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규제프리존'이 다시 한 번 떠오를지 주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후보 시절
 -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며 해당 법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것이라 입장을 밝혔음
 -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에 있어 '되는 것 말고는 다 하지 말아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안되는 것 말고는 다 해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기에 가장 충실한 법안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줌
- 최근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 확대와 규제프리존 교환을 고민해볼만 함
- 대신 후보 시절 문제인 대통령과 야당이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등 다른 법보다 우선해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대안을 찾자면 '규제 샌드박스' 또는 올해 초 준비하던 '4대 패키지법'을 들 수 있음
 -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 허가가 나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규제프리존은 지역을 위주로 법에 반영된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지정된 샌드박스 구역에 한해 민간 사업자가 주도, 생명·안전·환경 관련된 부분은 특례제한 조항을 포함
 - 4대 패키지법: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 관련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 지원사업,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ICT 융합특별법은 현재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신서비스에 특례 부여, 지역특구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재정 지원 등
 - 규제가 단순히 대기업만 제약한다고 볼 수 없음
 - 지난해 7월 아산나눔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40개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서비스, 조건부 허용까지 포함하면 100개 중 70개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
-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제약된 분야가 넓은데 이를 제한적으로 풀어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 실제로 3D 프린터 부품 판매를 하는 '삼디몰'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제재

4.美서 맺은 홍영표·김성태 약속에... 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파이낸셜뉴스

02

주요내용

-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구성, 규제혁신 5 법·규제프리존법 .. 양당 서로 전향적 검토 약속
- 1·2 당 원내대표간 공감대 .. 규제혁신 법안 처리 훈풍

-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여당의 규제혁신 5 법과 야당의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 기본법의 절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규제혁신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져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도 논의키로 해 민생경제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음
- 다만 일부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민주당, 규제프리존법 전향 검토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와 만나 홍 원내대표가 이같이 약속했음을 밝히며 "우리도 민주당 규제혁신 5 법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고 그 결과로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음
- 원내 1, 2 당 원내대표간 이같은 공감대가 공고해지면서 적어도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는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
- 전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 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 관련 법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 민생 법안의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3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가 구성되는 것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주장
-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 제공 등 논란을 지적, 규제혁신 5 법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으로 규제프리존법 내 일부 특례를 제공해보겠다는 입장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인프라 강화, 규제 혁신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인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의료분야의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입장이었지만 협의가능하다는 입장

실행 여부에 주목

- 민주당의 전폭적인 수용 가능성으로 민생경제법안 TF에서의 규제혁신 법안 논의도 활발해질 것
- 민주당은 지역을 넘어 새로운 특정 산업별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는 않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 법에 집착하기 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는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벌여왔던 만큼 이번에는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가 높다는 전언
-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 깜짝 놀랄만한 규제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부 법안은 TF가 실무조율하겠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말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의지를 보였으나 한국당에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 상임위별로 추가 논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전해졌음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 · 박근혜와 다르려면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

- 지난 23 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
 - 추진 방식도 파격적, 한달에 한번씩, 하나의 핵심주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다짐
-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내세웠던 단골메뉴
 -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 을 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대불공단 커브길 옆 전봇대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 운행이 어렵다” 고 지적해, 이른바 ‘전봇대 규제’ 라는 말을 회자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규제개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또 규제를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 등에 비유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
 - ‘사람중심 경제’ 의 비전을 천명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핵심정책으로 제시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함
-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몇개의 산을 넘어야 함

규제완화의 명분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많음

- 정부가 지난달말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기 직전 사전배포한 보도자료
 - 핵심이슈로 꼽은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정보통신 (IT) 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지분 보유현도를 현재의 4% 에서 34% 나 50% 로 완화 여부 논의 중이라고만 적혀있음
 - 개혁진보진영에서 우려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완장치 마련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만 언급
 - 또 다른 핵심이슈인 개인정보보호 완화도 마찬가지로
 -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작용과 관련해 책임성 강화 등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발표
- 이를 두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
 -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를 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얘기할 뿐, 규제완화의 이유, 효과, 부작용 방지대책에 대해 자세히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
- 청와대의 한 관계자
 -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가계금융만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완화 위험에 대비해 유출 책임자를 엄벌하는 조항을 넣는 대책을 논의 중

두 번째는 규제개혁이 ‘규제완화’ 와 동일시되는 문제

- 참여연대
 - 진정한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폐지하되,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 신설하는 일이 병행돼야 하는데, 현실은 규제완화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
- 정부 고위 관계자
 - 정부여당이 추진 하는 ‘규제 혁신 1+4 법’ 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프리존 법이나 서비스산업활성화법과 달리 규제완화의 주 대상이 기존 산업이 아니라 전략적 신산업, 스타트업 기업,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 · 박근혜와 다르려면

02

주요내용

중소기업 위주여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강조

- 사전적 규제 완화와 사후적 규제 강화를 맞바꾸는 ‘규제 프레임의 대전환’ 내지 ‘규제 빅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 중
- 청와대 관계자
 -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사전적 규제는 과감히 풀되, 법을 어기는 기업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우려

- 전성인 교수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은 그냥 해본 소리고, 성장은 역시 재벌과 손잡고 규제완화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
 - 300 여명의 지식인들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함
-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개혁성향의 홍장표 경제수석의 자리에 관료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을 기용한 것도 큰 빌미
- 하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사람중심경제의 세 바퀴에 비유하며 펼척 폼
- 야당 등 보수진영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관건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인 개혁진보진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촛불시민’의 공감을 얻는 문제
- 개혁진보진영도 원칙적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음
-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의 이유, 부작용 방지 대책, 필요한 규제의 강화 병행 방침,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의지 등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접점’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 문재인 정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증거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진보의 개혁 조급증’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개혁진보진영의 전열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
-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은 개혁진보진영이 다시 단합할지, 아니면 갈등 증폭으로 ‘자중지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6.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31 일 가동 ... 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Etnews

02

주요내용

■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규제 완화와 관련한 주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

- 5월에도 민생입법협의체를 출범하고 주요 법안을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31일 TF 회동을 갖고 각 당 중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를 출범
 -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규제를 해소가 주 목적
- TF는 27일 상견례를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경제법안 통과를 자신
 -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
- 다만 세부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큼
 - 여당의 규제 샌드박스과 야당의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간 간극도 여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견도 있어 TF 논의에 진통도 예상
- 민주당
 - 중점 법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TF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
 - 규제 샌드박스 4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 최저임금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
- 한국당, 바른미래당
 -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목표
 - 야당은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이 이 두 개 법안의 내용을 이름만 바꿔 쪼개놓은 것이라고 주장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 "법안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음"
 - 다만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인 만큼 법안 명칭은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
- 한국당
 -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
 -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규제완화 권한을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주는 내용 등이 골자
- 바른미래당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

1. 공유車 · 숙박,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규제 혁신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 박 장관은 정부 고위 관료 중 사실상 가장 먼저 `핵심 규제` 개혁에 나섰다
 - 복지부가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기득권 세력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면 충돌을 감수하기로 한 만큼 타 부처도 하루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 셈
- 원격의료를 잇는 핵심 규제 혁신 후보 리스트 중 일부는 이미 정해져 있음
- 공유경제
 - 차량 공유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석에 따라 불법 비즈니스로 분류될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고, 택시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라는 사회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수조 원에 달하는 개인택시 권리금 문제 해결 방안도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
 -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도시에서 하면 내국인 손님은 못 받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음
 - 주거지에서만 민박이 가능해 오피스텔 활용도 불법, 그 외 소화기 1 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가구원 중 외국어 능통자가 있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있음
 -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규제 개선 대상은 입지
 - 현 정부 들어 에너지신사업 혁신 방안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 규제와 설치 인허가 부담 등은 완화
 -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학교 내 기숙사 용적을 상향 조정,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원 이용 허용, 도립·군립 공원 내 농수산물 보관시설, 재배시설, 학교, 화장실 설치 허용 등도 이뤄졌음
 - 문제는 경제성장,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정책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
- 다음에 나올 규제 개혁 방안에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담길 가능성이 높음
 - 지금은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어렵고 도시개발 사업이 제한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 공장을 지으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함
 -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사고의 틀
 -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철학하에 만들어진 입지 규제는 수도권에 몰릴 투자가 지방이 아닌 해외로 이전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음
- 정부는 원격의료, 공유경제, 입지 규제 등을 포함한 10여 개 핵심 규제 개선 대상을 다음달 중 선정·발표할 계획
- 핵심 규제별 개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검토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연내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도 변함없음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 경기북동부 입지규제 완화

- 정부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입지 규제` 개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살리기 때문
 - 규제를 완화하면 막대한 시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게 정부 목표
 - 혁신성장에 힘이 실리는 최근 분위기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데 한몫
- 정부는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지역 중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 나갈 계획
 - 연천군은 행정구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천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저발전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
 - 이천이나 여주 같은 곳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한이 걸려 있기는 마찬가지
- 정부 관계자
 - 경기 북부지역의 저발전은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 영향이 큼
 - 경기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첫 번째 규제 개선 표적으로 삼은 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음
 - 실제로 정부는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경기),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시대 조성 (인천) 등의 방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상태
- 경기 동북부는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1 단계 작업의 성격, 다음 단계이자 최종 단계 성격을 띠는 건 바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 국토교통부는 인구 집중을 막는다는 이유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총허용량을 주기적으로 정함
 - 또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건축면적이 500㎡ 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그리고 업종 변경을 막고 있음
 - 수도권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 대부분
 - 이처럼 입지 규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 수도권에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 품목 지정도 2011년 8월 이후 7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음
 -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AI) 같은 각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음
 - 그나마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도 수도권 내 개별 입지에서 공장 증설을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음
 -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 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옮길 수 없고, 수도권 신설은 불가능
- 흥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만이라도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I를 비롯한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은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시험·평가)용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
- 수도권에 몰릴 투자가 지방이 아닌 해외로 이전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균형발전`이란 정책 철학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음

1.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로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2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남일보

02

주요내용

■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005년 7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의 이전을 재촉하는 결의문을 채택

- 협의회는 지난 27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소재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포함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
- 결의문
 -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의 추진 과제인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과의 상생발전, 연관기업 동반이전 등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또 기존 혁신도시의 추가활력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
- 이날 협의회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29일부터 1년간 임기를 맡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
- 향후에도 혁신도시의 추가 발전 방안을 지속 발굴해 공동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음
- 2006년 출범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구성

2.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충청·호남·강원 협의회 추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7.3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 충북도가 강호축 (江湖軸) 을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충청, 호남, 강원의 공조 강화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
 - 강호축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벨트로, 서울에서 대구, 부산 등 국토를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 (京釜軸)' 에 대비되는 개념
-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 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강호축 개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강원,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등 8개 시·도는 그동안 두 차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통해 4개 지역의 시장·지사가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공조 체제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충북도는 공조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4 일께 강호축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8개 지역 공동 건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
- 또 8개 지역의 시장·지사, 시민단체 대표, 시·도 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대표,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호축 발전협의회' 의 설립을 구상
- 이 협의체가 출범하면 강호축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준비, 정책적 지지를 위한 홍보, 지역·분야별 사업의 유기적 추진 등을 맡아 강호축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8개 시·도는 지난 17 일 강호축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연계사업이 담긴 지역별 국가균형발전 5개년 발전계획 초안을 정부에 제출
- 충북도는 다음 달 말께 강호축 개발 의지를 모으기 위한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체 구성
- 충북도 관계자
 - 민선 7기 8개 광역자치단체가 공조해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로 만들어 나갈 것